

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「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」의 핵심입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9.28. 경향신문은 「정부가 만드는 자발적 탄소시장... '감축 뺑뺑이' 걸러낼 수 있나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기후환경단체 플랜1.5의 분석 결과 대한상의 자발적 탄소시장 등록 사업 중 일부 사업이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감축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,
 - 감축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하면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렵고 정부 주도로 그린워싱을 용인한 사례로 남을 위험이 있어 해당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기획처는 신뢰받는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4.27일 「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「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향(4.27일)」 주요 내용

- ◇ 우리 경제의 탄소감축 동력 강화와 기후테크 기반 확충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
 - ⇒ ❶ 「자발적 탄소시장법」 제정으로 K-VCM 시장규율 확립
 - ❷ 거래소를 개설해 통합적 거래 인프라 구축 및 수요자 접근성 제고
 - ❸ 민관합동 얼라이언스 운영 등을 통한 수요-공급 연계

- 현재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국가 온실가스의 70%가 관리되고 있는 바, 나머지 비규제대상 기업의 감축유인을 제고하여 국가 NDC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테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 - 다만, 그간 자발적 탄소시장이 관련 법 미비 등으로 엄밀히 관리·감독되지 못해 일부 탄소크레딧의 경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탄소크레딧 발행·유통·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「자발적 탄소시장법」은 감축실적 부풀리기 등 그린워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반입니다.
- 「자발적 탄소시장법」에 탄소크레딧 활용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인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명시하는 가운데,
 - 정부는 ICVCM 핵심탄소원칙(CCP)* 등 글로벌 기준들을 검토하여 적격 탄소크레딧에 대한 기준 마련을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.
- * ICVCM(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)가 탄소크레딧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10가지 핵심탄소원칙 : 투명성, 추가성, 영구성, 이중계상 방지 등
- 부정 크레딧 관리·감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, 감축실적 부풀리기, 시세조작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.
- 나아가, 글로벌 수준의 공신력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 심사시 해외 주요 평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탄소크레딧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.
- 이미 생산된 감축실적이 모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이 아니라,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탄소크레딧 요건을 갖추어야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.
 - 또한, 국내기관이 발행한 탄소크레딧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·고신뢰성 표준 마련, dMRV 시스템 구축, 레지스트리 운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*입니다.

* (9.2일) 기획처는 글로벌 탄소크레딧 인증기관 GCC(Global Carbon Council) 및 대한상회의와 「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」를 체결해 탄소크레딧 인증·발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마련

- '23년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품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고, 이에 따라 ICVCM CCP 마련, CORSIA 적격 크레딧 심사 기준 강화 등 탄소크레딧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국제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.
- 실제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은 그린워싱 논란이 적은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.
 -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탄소중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진승우 (044-214-16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모 (zamo@korea.kr)

